

출 장 보 고 서

I. 출장개요

1. 출 장 자 : 원장 채 욱
2. 출장기간 : 2012. 5. 14 - 2012. 5. 19
3. 출 장 지 : 러시아 모스크바
4. 출장목적 : 국제세미나 참석

II. 출장일정

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2012.5.14	인천-모스크바	이동	
2012.5.15	모스크바	세미나 참석:	
2012.5.16	모스크바	세미나 참석:	
2012.5.17	모스크바	세미나 참석, 모스크바 출발	
2012.5.18	인천-모스크바	이동	

III. 주요 활동 내용

- 2012년 러시아 정책 협의회 기조연설 및 참석

IV. 활동 내용(상세)

가. 세미나 개요

- ☐ ‘김정은 시대의 북-러 관계전망과 남-북-러 경제·정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19일(4박 6일)까지 회의 개최

나. 세미나 주요 내용

1. 첫째 날(2012.05.15)

(1) 첫 번째 세션

□ 발표자 - Dr. Leshakov, Head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Moscow State University

- 북한변화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할 수 있으며, 러시아에서 논의되는 주장 중 하나는 북한이 권력다툼에 의해 2030년까지 붕괴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임.
- 한편 러시아 내부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장기 집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존재하며, 북한 나름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 할 것을 주장하는 러시아 대북전문가들도 존재함.
- 1990년대 소련붕괴 시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자리매김함.
- 오늘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상황이나, 북한경제 상황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인해 과거 1990년대 수준만큼 어려운 수준은 아님.
-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원리가 서서히 작동하는 것으로 관측되나, 이러한 변화가 현재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직접적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
- 구)소련의 붕괴와 러시아로의 전환경험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할 수 있음.
- 군수경제 중심인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다면, 북한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적응시켜야하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임.
- 구)소련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지도부가 가장 고민했던 과제가 시민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이었음.

- 북한이 개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주변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등의 도움이 절실하며, 특히 체제전환을 경험한 러시아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북-러 경제협력은 2000년대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채무문제에 기인함.
 - 1990년대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은 29억 달러(환율 1달러=0.67루블 수준)였으나,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액을 현재 기준으로 재 환산해보면 규모가 110억 달러에 이름.
 - 북한은 채무문제를 정치관계로 탕감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탕감조건으로 요구하는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임.
-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음.
 - 북한은 제품생산에서 동북아의 센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마그네시아를 포함해 러시아 공장가동에 필요한 원료들을 수입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음.
 -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양국 경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러는 대표적인 3자간 협력 사업으로 △TSR-TKR 연결사업 △가스관 연결사업 △전력 연결사업을 논의해오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 및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음.

□ 토론자 1 -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

- 푸틴정권이 재집권했는데 2000년 집권당시와 비교할 때 대북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함. 이에 대한 답변 요청.

- 최근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요청.
- 러시아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북-러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설명 요청.
- 2011년은 북-러 정상회담이 9년 만에 재개된 의미있는 해로 평가되는데,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에서 실제적인 관계개선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설명 요청.

□ Dr. Leshakov 답변

- 푸틴은 집권 초기 북한을 관심국가로 지정하였음.
-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대북정책 방향은 한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현재 대북정책에 관여하는 대통령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입장은 매우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
- 개인적으로는 북-러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며, 푸틴 행정부의 움직임을 분석했을 때 북-러 경협은 푸틴의 숙원 사업인 시베리아 철도연결 사업을 중심으로 재시도 될 것으로 보임.
 - 2008년 러시아 철도청이 이미 시베리아 철도사업에 1억 달러 이상 투자했으며, 민간기업도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나선개발의 경우 현재 러시아는 손해를 보는 상황임.
 - 현재 러시아는 라진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공사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서 이 터미널에 컨테이너를 보내고 있지 않아 러시아가 매년 100만 달러 이상 손해를 보는 상황임.
- 라선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가 중국과 이해마찰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북한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이 매년 증가해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임.
- 실제 중국이 위엔화를 북-중 무역에서 통화수단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러시아에 대북투자 제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음.
- 3기 푸틴 행정부는 북한을 포함해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토론자 2 - 박윤환 무역협회 실장

- 북-러 관계는 북한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전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답변 요청.
- 라진항 개발이 현재 적자 상태라면 추가적인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요청.
-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에 대해 탕감할 의지가 있는지 문의.

□ Dr. Leshakov 답변

- 2000년대 초까지 러시아는 북한의 주요 무역대상국이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 및 채무문제로 인해 북-러 무역은 대폭 감소함. 국가 간 무역은 상호 균형 속에서 진행되어야 함.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원료수입에 관심을 갖는 반면, 북한은 원료의 대부분을 중국에만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역구조는 불균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라진항 개발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러시아 철도청은 라진항 개발을 위해 1200만 달러를 투자하였음. 현재까지 러시아 철도청은 라진항 개발과 관련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임. 라진항 개발사업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투자

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난 해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채무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이는 채무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아닌 북한의 채무가 존재하는지와 계산방법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채무탕감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실제 과거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에 원료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러시아는 채무문제를 이유로 에너지·원료지원을 거부함.

□ 자유토론 - 정길태 사무관

- 북한의 채무상환에 대해 광물과 같은 현물상환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데, 그럼 광물채굴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지 답변 요청.

□ Dr. Leshakov 답변

-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민간기업들에게 북한 광물개발에 참여할 것을 장려한 적이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 제재,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가 존재하고, 양국 정 부간 차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주저되는 상황 임.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 민간자본을 북한경제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임.

(2) 두 번째 세션

□ 발표자 - Dr. Aleksey, Maslov, Professor, Head of the School of Asian Studies, Higher School of Economics

- 러시아 푸틴정부는 메드베데프 정부와 다르게 동북아를 대상으로 외교정책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메드베데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푸틴 대통령은 처음 집권 시부터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외교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음.

-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푸틴 대통령의 외교노선은 이번 3기 푸틴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올 해 9-10월 중에 러시아가 극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외교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다음달 6월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임.
- 푸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재국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오늘날 중국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차원 모두에서 크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러시아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남북 간 관계에서 주요 중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바라는 바는 아님.
- 러시아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주요 중재국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함.
- 중국은 북한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임.
- 북한 유학생의 80%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대부분이 공대분야에서 기술자 양성수업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추세가 향후 4-5년간 지속된다면 북한의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곧 인재양성을 통해 북한을 엮매려는 중국의 의도가 내포된 처사로 풀이됨.
- 중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시장논리를 도입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은 북한의 전체 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낮기 때문에 중국 측 주장을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평가함.

- 현재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파트너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러시아는 북한을 점차 경제파트너로 성장시킨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러시아는 중국세력을 견제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상해기구 회원국으로 추천할 용의가 있음.
- 상해기구는 정치,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는 기구이며, 러시아는 최근 상해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음.
- 북한과 같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현재 상해기구의 대화 파트너이며, 이를 북한에 대한 모델로 적용할 수 있음.

□ 지정토론자 1-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 푸틴 대통령이 구체적인 동북아 복귀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문의.
- 상해협력기구에 북한을 가입시킨다는 전략만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푸틴 정부가 동북아 다자협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지 문의.
- 한-미 관계는 현재 동맹관계일 뿐만 아니라 차관급 전략대화 체계가 구축된 수준인데 반해, 한-러 관계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푸틴 정부가 동북아 국가들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한국과 전략대화 체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문의.

□ Dr. Aleksey 답변

-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동북아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입장표명을 거부하거나 불참했던 사례는 없었음. 이는 러시아가 아태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국가라는 사실로 해석됨.
- 상해기구는 동북아 국가들의 집단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개별국가에 대한 조치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음.

- 한국과 러시아는 최근 핵문제와 한반도안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환경문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국제이슈에 대해 연대입장을 표명하였음. 특히 동아시아의 안보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한국과 완전한 정보공유 방안을 제시하였음.
- 푸틴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력을 이용해 러시아 아무르 지역에서 200헥타 규모의 농지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계획임. 특히 석유수송관 건설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송관 건설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기업들과 합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 본인은 한-미 관계 및 한-중 협력관계 강화를 러시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함.

□ 지정토론자 2- 안병민 센터장

-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간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면서 남한과는 경제, 북한과는 정치협력을 강조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 예상됨.
- 푸틴 대통령이 강조하는 극동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극동사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게 요구됨.
- 푸틴 대통령이 올해 2월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함.
- 북한과 중국 간의 특수 관계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에는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가 국제정치 구도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견 요청.
- 푸틴정부가 남북러 가스, 철도 연결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북한의 가스관 사업을 건설하려면 가스관을 수송할 도로 및 철도시설 등 인프라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에는 가스관 수송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만한 인프라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즉 가스관 사업은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사업과 병행되어야 할 패키지 사업임. 그러나 이러한 패키지 사업은 안보문제가 해결될 때만 가능함. 푸틴 대통령 외교는 방문외교 방식이 중심인데 남북러 철도, 가스관 연결사업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핵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견 요청.

□ Dr. Aleksey 답변

- 석유 및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논문에 수록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발표될 것임.
- 러시아는 철도, 수송관 사업을 단계별로 이행하자는 입장임. 사실 안보문제로 이행속도가 매우 더뎠음. 북한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핵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매우 불안해진 것은 사실임.한편 안보는 곧 해당국들 간의 대화와도 연결되어 있음. 현재 한국은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인데 한국은 사업추진과 대화 문제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겠는가? 북한은 다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한국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세 번째 세션

□ 발표자 - Dr. Vorontsov, Alexander, Head, Department for Korea and Mongolia,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푸틴정부는 이룩크츠산 석유를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몽골을 경유해 한국으로까지 운송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음.
- 또한 푸틴은 시장에서의 석유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시베리아 서부산전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는 계획도 구상한 바가 있음.
- 현재 한국과 동남아는 중동국가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연료를 공급받고 있는데,

중동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음.

- 반면, 한국과 러시아는 이웃국가이고 거리도 중동국가와는 가깝기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가스연결 사업은 북한을 통과하는 수송관 문제로 인해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한-러 양국은 서해 해저를 통과해 수송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만일 가스관이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에 도달하고, 북한이 가스관을 막았다고 할 때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10%이내 즉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임.
-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은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세계 연료시장 추세를 감안해볼 때 양국은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지정토론 - 정길태 사무관

- 가스관 협력사업은 남북러 3국이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3국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가스관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시, 첫째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요청.
- 둘째, 통관료 문제와 연계하여,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음. 동 사업의 통관료는 연간 1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 통관료에는 일반적으로 국경통과에 다른 수송료, 불편비용보상비가 포함되는데 통관료 책정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음.
- 셋째, 가스관 건설비용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 대해 듣고 싶음. 기관별로 상이하나, 가스관 건설비용으로 약 3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북한은 작년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컨소시엄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그렇다면 가스관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함.

□ Dr. Vorontsov 답변

- 가스관 비용 문제는 향후 한-러 양자협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파이프 건설에서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통관료 문제는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이재영 연구위원

- 가스관 건설에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 러시아 정부가 투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 대기업이 나서야 하는 문제임. 그러나 러시아 대기업은 극동지역보다는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심지역에다가만 투자를 확대해오고 있음.
- 러시아 대기업이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에 계속 밀리게 될 것임.
- 새로 들어선 3기 푸틴정부가 극동개발을 위해 대기업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을지 궁금함.

□ Dr. Vorontsov 답변

- 대기업은 이윤이 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 마련. 가즈프롬은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 대표적인 대기업임. 가즈프롬처럼 푸틴은 러시아 다른 대기업도 극동지역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기업들을 독려할 것으로 보임.
- 본인은 한반도 가스수송관 건설의 어려움을 매번 북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북한은 러시아 소속으로 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였음. 그러나 한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사업전개 및

동참을 거부함. 북한은 가스 수송료의 15%를 차지하는 통관수수료를 포기하면서 까지 수송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명성과 신뢰라고 생각됨. 변화를 경험하면서 서로의 신뢰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이 전개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2. 둘째 날(2012.05.16)

(1) 첫 번째 세션

□ 발표자 - Dr. Suslina, Svetlana, Chief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푸틴정부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 라선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두만강-라진 간 54킬로미터의 철도구간 현대화 사업을 이미 착수하였으며, 동 사업은 2012년 10월 완공될 계획임. 이는 러시아가 라선개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임.
- 라선개발은 1990년대 시작과 함께 미국, 네덜란드, 홍콩, 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을 받은 사업임. 그러나 한반도 안보위협 및 북한 내 상존하는 다양한 제약요인들로 인해 사업이 거의 중단됨.
- 최근 20년간 북-러 관계는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나, 양국은 경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임.
- 남-북-러는 친환경적인 사업 분야에서 3자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특히 농업분야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3자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토론자 - 박윤환 무역협회 실장

-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협방식에 있어 가스관 및 철도연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창의적 모델을 사용해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 요청.
- 북-러 간 경협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 땅에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지역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운영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궁금.

□ 토론자 - 안병민 센터장

- 작년 12월 북한은 라선개발에 대한 법을 개정함. 개정된 법규를 살펴보면 라선 개발을 둘러싼 중국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러시아 측의 입장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법개정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북한과 협의한 것이 있는지 설명 요청.
- 철도연결 사업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중요 사안임. 2008년도에 나진 핫산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 한국의 6개 기업이 러시아 기업과 공동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논의한 적 있음. 그 때 러시아는 투자는 요청한 반면, 한국기업의 경영권 확보는 거절함. 민간 기업이 실제 투자하려면 수익성 또는 경영권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라선개발은 중국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임. 한국 및 러시아 기업이 라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요청.

□ Dr. Suslina 답변

-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설립을 러시아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러시아는 중공업 및 경공업 분야의 기술전수 차원에서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해본 적이 있음.
- 또한 개성공단과 유사하게 과거 러시아는 북한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경협을 추진한 적도 있었음.

- 본인은 개인적으로 남-북-러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3국은 과거부터 꾸준히 하게 논의해온 전력, 철도, 석유관 건설 사업을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푸틴 대통령은 현재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신호들을 보내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3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국가 간의 정치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푸틴정부는 극동지역 개발 및 논의되는 주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국간 정치협력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 토론자 -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 러시아의 라선개발에는 경제적 타당성 논리가 결여된 것으로 보임. 러시아가 추진하는 컨테이너 사업이 적자를 보는 상태라고 하는데, 라선을 통해 수출한다고 해도 러시아 소비시장이 라선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북중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 중국정부는 재원을 투입하면서 라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임. 러시아도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푸틴정부가 북러 경제협력을 위해 재원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

□ 토론자 - 이재영 연구위원

- 현재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무역은 불균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 한국이 러시아에 투자한 규모는 27억 달러인데 반해 러시아가 한국에 투자한 규모는

5천만 달러임. 러시아와 한국간의 사고 및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려야할 것으로 보임. 한국-러시아 간 신뢰가 회복된다면 3자 협력에 대한 돌파구도 마련될 것으로 보임.

- 3자 협력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3대 사업추진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보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의견요청.
- 또한 3대 프로젝트 이외에도 인프라 개발, 농업, 임업 등 남-북-러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임.

□ 토론자 - 정길태 사무관

- 북한의 GTI 재가입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요청. 특히 북한이 GTI에서 탈퇴한 상황인데 재가입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설명 요청.

□ Dr. Suslina 답변

- 중국의 부상에 대해 러시아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중국 부상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국전문가들에게 역질문을 하고 싶음.
- 라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다가 GTI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 이유는 라선사업은 3자간 사업인 반면 GTI는 6개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
- 3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발족하는 제안에 대해 본인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동감함.

(2) 두 번째 세션

□ 발표자 - Dr. Verkhoturov, Dmitry, Chief research fellow, Central Asia
Institute for Development

- 6자 회담이 위기에 봉착한 주요 원인은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은데 기인함. 2003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북미수교, 일본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북한에 경수로 건설 등을 요구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을 제시함.
- 북한은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북한의 회담국들과 합의한 사항은 일부만 실천됨.
- 이로 인해 북한은 2006년과 2007년 핵실험을 감행하고, 곧바로 미국, 일본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적용됨.
- 그 이후로 북한은 핵문제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옴.
- 이를 통해 배우는 교훈 중 하나는 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는 북한과 미국의 신용결여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임.
-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는데 이는 오히려 북핵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오늘의 북한 정치, 경제 제도는 한국전쟁의 산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활성화하여 양자간의 대화채널을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
-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됨. 한국이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가려고 시도할 때 6자 회담은 성과가 있었던 반면, 한국

이 미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시기에는 6자회담이 침체기에 접어들.

- 한국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 대북제재철회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

□ 토론자 -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 북한 핵문제가 잘 안풀리는 원인은 신뢰결여 때문이라고 생각. 2011년 김정은 체제는 핵무기와 인공위성 보유를 김정일 정권의 최대 산물이라고 얘기한 적 있음. Verkhoturov 박사님께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요청.
- 6자회담 4차 라운드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됨. 9.19공동성명이 채택될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는데), 9.19 공동성명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
- 6자회담에서 러시아는 5개 워킹그룹의 의장국 역할을 해왔는데, 6자회담이 중단되면서 동북아 평화 워킹그룹도 중단된 상황임.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러시아가 동북아 평화안보 워킹그룹을 부활시키고,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구상할 계획이 궁금.

□ Dr. Verkhoturov 답변

-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원자(로) 생산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은 핵개발이 불가역적인 상황임.
- 따라서 북한 내 핵시설을 군사용도가 아닌 민간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필요하다고 생각. 이런 차원에서는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 상기 언급된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6자회담을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 북한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진다는 점임.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체는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 왜냐하면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전쟁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장 장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오히려 동아시아에서의 미군병력을 축소하는 것이 해결방안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임.
- 공동성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을 하자면, 공동성명서는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따라서 오늘날 상황은 변했지만 여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오히려 한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한반도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국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북한의 핵문제는 조금씩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채욱 원장님

- 북한의 핵위협이 전쟁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러시아 입장은 어떠한지 의견을 요청함.

☐ Dr. Verkhoturov 답변

- 만일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러시아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것임. 그렇다고 러시아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수차례 발생했음.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함.
- 북핵문제는 국제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 Verkhoturov 박사께서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주한미군 감축을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은 동북아 세력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감축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북한의 군용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 핵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셨는데 현재 한국에는 20여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임. 북한은 원자력 발전 기술 낮은 상황임. 결과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전력을 제공받는 안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요청.

□ Dr. Verkhoturov 답변

- 안전보장장치 질문에 대해,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회담국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유관 국가들은 모든 국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회담국들은 특정국가에게만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태도대신 합의된 사항은 모두가 지키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임. 만일 각국이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한다면 북핵문제 상황은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 핵처리 문제는 기술차원과 정치차원 문제가 함께 결합된 문제임. 북한은 원자력 개발 기술을 1952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음. 북한은 원자로 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 핵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자유토론(2012.05.17)

□ Dr. Aleksey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상이함.
 - 중국은 북한을 이용대상으로 대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러시아는 북한을 동등한 협력대상으로 대함.
-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 시베리아 극동지역은 관광, 자원개발 차원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는데 북핵문제 및 이로 인한 한반도 안보불안은 극동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옴.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수뇌부뿐만 아니라 중간급 지도자들의 인식변화가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국제사회와의 교류증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 지도부의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와 러시아 지도부의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성향이 강함. 예를 들면, 북한은 과거 풍차와 자동차 부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하였음.
 - 반면 러시아는 북한을 대등한 협력국으로 인정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전개하고자 함.
-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답습할 것으로 보임.

□ Dr. Zhebin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변국들은 어떠한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 서독은 20년간 동일한 통일정책을 유지한 반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기조가 쉽게 바뀜. 이는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임.
- 또한 동서독이 통일한 지 20년이 흘렀고, 그 사이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독일의 통일경험을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임.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교훈이 남북통일을 유도하지는 못했음.
- 남북회담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되고 있음. 이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양자관계를 좋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정치, 문화적인 차원의 교류는 차단하고 경제교류만 허용하는 상황임. 이는 곧 양국간 경제협력이 남북통일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특히 북한은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 중국이 북한을 이용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언론이나 중국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와는 다른 것으로 보임.
- 3자 협력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 Zhebin 박사께서는 독일의 일관된 통일정책이 독일통일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남북 상황과 동서독 상황은 다름.
- 또한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이용한 북한의 변화 전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북지원으로 전달된 비용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강함.
-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만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군비통제와 긴장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Dr. Verkhoturov

-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철도건설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한국이 동시베리아 철도건설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 안병민 센터장

- 동시베리아 철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철도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해 메첼과 러시아 철도청이 마찰이 있었음.
- 한국이 우려하는 바는 만일 한국이 동시베리아 철도사업에 참여할 경우 메첼-러시아 철도청 사례와 같이 러시아 철도청과 마찰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임. 만일 러시아 측이 분쟁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면 한국의 동시베리아 철도건설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Dr. Asmolov

-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규정하는데 북한은 예측이 가능한 나라임.
 - 북한은 작년부터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국제사회에 알렸음.
- 또한 북한의 3차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를 위협했다고 이야기하기도 어

려움.

- 북한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일 것으로 보임.

□ Dr. Kim

- 중국은 러시아에 어디까지 위협대상인지 궁금
- 중국의 동아시아 통합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

□ Dr. Aleksey

- 러시아 내에서 중국은 정치, 경제적인 모든 차원에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됨
-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며, 양자간 경제협력은 전략적 협력형태(Strategic Cooperation)로 추진될 것임.
 - 첫 번째 단계에서 러시아는 중국기업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장려할 계획임.
 -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전략으로 양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갈 것임. 예를 들어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간 경제통합이 시도될 것임.
-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정치, 군사협력까지 협력의 폭을 넓혀갈 계획임.